

與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허 쩌린 野

새누리 비대위 혁신안 의결
의원 징계안 본회의 자동부의
8촌이내 친인척 보좌진 금지
정치 개혁·대선 정국 주도권

與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개혁안 주요 내용

- 특권 내려놓기**
 - ▶ 불체포 특권 포기
 -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동안 표결되지 않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차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
 - 회기 중이라도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의무화
 - ▶ 과도한 본회의·상임위·특위 출석 수당 개편
 - ▶ 징계안 회부 시 60일 이내에 심사, 원로 못할 경우 본회의 강제부의
- 감찰·편법 대응**
 - ▶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 ▶ 자신의 보좌진으로부터 정치후원금 모금 금지
- 의정 활동 개선**
 - ▶ 캘린더 국회 정착
 - 입시국회가 있는 달은 1일이 무조건 개혁, 매우 목표달성은 본회의 개최 지정



‘결연’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세로 솔선수범하고, 기대에 부응 못하면 공멸한다는 생각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를 망라하고 선거비용 리베이트 파문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 시비, 보좌진 급여 유용 등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지난 30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내놓았다.

비대위는 전날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일률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혜 시비가 새누리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자 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련 법규 미비로 친인척 채용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공공연한 관행처럼 돼있는 만큼 시간이 갈수록 이에 따른 논란과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일만 남았다는 판단 아래 국민의 비난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처럼 4·13 총선 참패 이후 일단 내분으로 인한 갈등과 무능력한 이미지로 얼룩졌던 여당이 혁신 작업에서 야권에 앞서 ‘선수(先手)’를 점으로써 일단은 오렌만에 개혁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활동 종료 ‘세월호 특조위’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野 “선체 조사 위해 활동 연장” vs 與 “불가”

세월호특조위, 국회에 특검요청안 다시 제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법정 조사활동 시한이 지난 30일로 끝난 가운데 기한 연장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더민주의 노력이 중단되진 않는다”며 “여야 협상을 통해서 조사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조사활동 기한 종료로 당장 특조위가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이 남은 만큼 조사활동 기한 연장을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이날 전격적인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으로 촉발된

대선 잠룡들 모두 장외로

문제인·안철수·손학규·김무성 등 조기 레이스 가능성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의 사퇴함에 따라 여야의 잠룡들이 모두 ‘장외’에 포진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조기에 펼쳐지지 않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출마하고서 지난 13일 네팔로 출국해 히말라야에서 트레킹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최근 4·13 총선 후보비 파동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나 평당원의 신분으로 돌아왔다.

여야 ‘老馬之智’로 위기 돌파

3당 비대위원장 평균 연령 ‘72.7세’

임시 지도체제로 전환한 여야 3당의 수장이 모두 70세 안팎의 ‘노장(老將)’이어서 주목된다.

안야 당 쇄신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정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정계 원로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1월 내홍과 선거 연패에 시달리던 더민주의 구원 투수로 등판했다.

더민주, 대기업 前임원 사외이사 금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전직 임원의 사외이사 임명 금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임기 역시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직접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양림지점 652-9203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